

종합

‘재·보궐선거’ 또 혈세 쏟아붓나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오는 10월 25일 재·보궐선거 치르게 된 전남 3개 지역 국회의원 및 군수 선거에 약 20억원의 주민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게 됐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지출하지만 지방선거는 전액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안군선관위와 화순군선관위는 최근 신안군수와 화순군수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각각 5억5천683만원과 4억9천983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해당 자치체에 요청했다.

이는 후보 선전용 벽보 설치와 선거공보 발송, 투표표 종사원 수당 등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으로 해당 자치체의 예비

10.25 선거 3곳 지방비 등 20억 들어

“비리 당사자·정당에 비용 부담케 해야”

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개표소 안내 플래카드 설치 등의 행정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

여기에 선거공영제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100%를 보전해주도록 돼 있어 이를 합하면 자치단체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신안군은 지난 5·31 지방선거 비용으로 5억1천200여만원을 부담한 바 있어 올해 선거에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화순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화순의

예 머물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에게는 재·보선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다. 전체 예산의 10% 가량을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있지만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태풍 등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예산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보선은 마땅히 치러야 할 과정이지만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보선 대상지역 일부 주민들은 “군수나 국회의원의 개인 비리나 불법 행위로 두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주민의 피폐가 백 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비리 당사자와 해당 후보를 부담한 정당에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경우 지난 5·31 군수선거에 보전비용으로만 1억3천800여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국비로 부담하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7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억5천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오는 10월 25일 재·보궐선거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쳐 20억원 가까이 될 셈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휴게텔 등 성매매업 영업정지

장소 제공 건물주 처벌·해외성매매 여권 취소

여성부, 성매매업소 규제법 제정 등 연내 추진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변종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추진한다.

변종 성매매 단속 및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한편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가동하고, 성매매 신고 포상제를 확대하는 등 성매매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순 차관은 “2년 동안 국민 의식 개선과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변종 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창순 차관은 “2년 동안 국민 의식 개선과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변종 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앞으로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해외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처분 근거가 없어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시행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일 오후 3시 대전시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총회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의장단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필

강진군 등 22곳 ‘전원마을’ 윤곽

서울 코엑스 조감도 전시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원마을을 조성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농림부는 오는 10월 12~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강진 등 전국 20개 시·군이 추진중인 전원마을을 22곳의 조감도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전시하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조성되는 전원마을의 경우 한옥 단독주택으로 지어지며, 모두 26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한옥 주택은 196평의 택지 위에 24평 규모로 건축된다. 가구당 입주가격은 택지 가격 3천만원과 건축비 1억원, 공동시설분담금 1천만원 등 모두 1억4천만원 수준이다.

강진 전원마을에서는 음악과 미술·문학·영화 등 각종 예술·문화활동 및 피트니스 클럽을 활용한 건강생활을 즐기게 된다.

전국적으로 22개 전원마을의 전체 입주가구 규모는 총 2천959가구다. /홍철기자 hredplane@

“거래세 인하 따른 세수감소 대책 세워야”

시장·군수·구청장 협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취·등록세(거래세) 인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대책과 의례적인 행사를 금지한 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230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0일 대전에서 민선 4기 제1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갖고 지방세수 감소 대책 등 4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세 인취·등록세 인화와 관련, 감소된 세액 보전대책으로 관공부동산세교부금을 시·군·구에 분배하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시·군·구에 교부하는 한편 취·등록세 감소분(2006년 약 2천600억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의 과잉규제로 인해 자치단체의 정상적 행정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등 지방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시 부상 수여 및 기부 금지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는 물론, 문화·복지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 및 공천과정에서 각종 부패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잘못 거둔 지방세’ 광주 70억·전남 153억

작년 전국적으로 4천억

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둬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천190건으로, 액수는 4천269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9천162건, 3천360억원)에 비해 건수와 액수가 각각 26.1%, 19.8% 늘어난 것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3만6431건, 액수는 70억8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4년(2만7천794건·50억2천2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1%, 액수로는 41% 증가한 것이다.

전남의 지방세 과·오납 액수는 153억1천900만원(6만2천3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에 이어 6번째였다. 지난해 2004년(3만8천16건·64억1천4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63.1%, 액수는 138.8%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세목별로 주민세가 1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13개 시도지사·국회의원들

‘지역균형발전법’ 공식 출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지사와 시·도별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20일 공식 출범하는 등 수도권 개발에 반발하는 비수도권 지역들이 조직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행정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대표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선임됐다.

지역균형발전협회는 전남에 이낙연 의원(민주당), 광주에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 비수도권 13개 시·도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함께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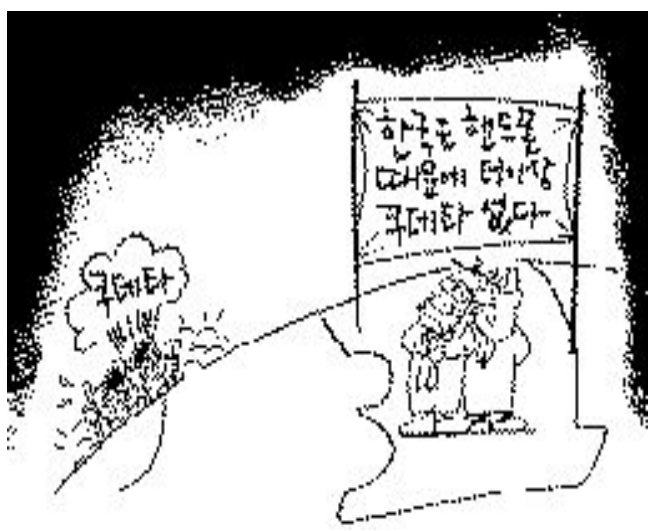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빛의만평

- 김중두



태국에 핸드폰 수출이나 많이하지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real estate listings, and public information. Includes '광고접수안내', '합병 공고', '정정 공고', '합병 공고', '합병 공고', '합병 공고',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건물임대', and '무담보 무보증'.